

수도권·충청권 70% 이상 독식...국가 불균형발전 주범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인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5>R&D 국책사업 공모방식 바뀌야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관련 투자 사업에서 심각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남소외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30년간 지역적 불균형이 고착화하면서 지역 간 과학기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최대 소비처인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특정지역 소외현상을

2019년 광주·전남 4% 불과

일률적 기준 적용 30년 호남소외

지역간 경쟁공모 등 전면 개선을

막기 위해선 대규모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인프라·기관·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시 균형발전요소를 주요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지역별 발전도 및 투자 촉진 수준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 4597억원 중 광주 4800억원, 전남 3200억원으로, 각각 2.4%와 1.6%에 불과했다. 전북은 7500억원으로 3.7%였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전체를 합해도 1조 5000억원으로 7.7%에 머물렀다.

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6조 6000억원

으로 32.6%를 차지했고, 대전 5조 8000억원(28.6%), 충청·세종 1조 6000억원(8%), 부산·울산·경남 3조원(15%) 등이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를 점유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불균형이 아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2002년부터 2019년간 누적된 정부 R&D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90조 3144억, 충청권 82조 4892억원, 영남권 38조8521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은 15조원에 불과하다.

정부 R&D 투자액의 수도권·충청권 쏠림 현상은 특정 지역에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는 등 지역 불균형적 과학기술 투자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호남권은 광주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1곳, 전북에 한국식품연구원 1곳 등 2곳(8%) 뿐이다. 반면 대전 등 충청권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15곳과 부설연구소 2곳 등 17곳(68%)이 집중돼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입된 과학

기술 대형 인프라도 호남권은 총 3개에 불과하지만, 충청권 7개, 영남권 6개 등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자된 8조2000억원 중 60%인 5조원이 대전지역에 집중 투자됐으며, 광주는 731억원, 전남은 591억원이 투자되는 데 그쳤다.

정부 R&D 예산을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학교 연구 예산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대학 R&D 투자 예산의 55%인 3조9000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됐으며, 충청권 대학에도 13%에 해당하는 9200억원이 배정됐다. 호남권 대학은 전체 9.4%인 6600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심각한 불균형 지원의 원인으로 지역별 발전격차를 무시한 국가 제도와 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만은 우선시하는 경쟁공모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신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과학기술의 물적·인적 자본이 축적된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우호적인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9년 첨단로봇융합단지(사업비 4조 3000억)도 충북 청주에 유치됐고, 2011년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대전·충청·세종, 2조 3000억), 2020년 방사광가속기(광주, 1조원) 등도 충청권이 연이어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전남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이미 과학계에 형성된 충청권 선호 흐름 앞에 무너졌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황성웅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장기적 불균형 투자로 과학기술 선발전역과 후발전역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무시하고 적용 중인 동일 기준 지역 간 경쟁공모, 일률적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투자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과학기술 기반과 역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0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1천만원 정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재명-이낙연 '불안한 휴전' ...아슬아슬 비방전 지속

경선불복·지사직 유지 놓고 설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슬아슬한 수위의 비방전이 지속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는 이 전 대표의 전날 언급을 두고 "이 발언 자체가 양심의 문제다. 이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선 불복' 발언 논란에 휩싸인 설훈 의원을 향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아마 마지막 흔들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명을 요구한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는 네거티브 말고는 전략이 없는 것 같다. 네거티브로 1위 주자를 흔들어야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도 그러한 전략을 계속 갖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실제 공방 이력을 표로 그려보면 누가 먼저 네거티브를 했는지 답이 나온다"며 네거티브 책임론을 이낙연 캠프에 돌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청의 기본소득 홍보예산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

황분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홍보로 34억이나 지출됐다. 미국이나 유럽 언론사에도 4억원을 들여 홍보했다"며 "경기도청을 자신의 대권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둘러싼 '경선 불복 발언' 해석을 일축했다.

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선 불복이라는 거짓 프레임은 씌워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국민 1천만원 마이너스 대출" 이낙연 "전 국민 '주치의 시대' 열겠다" 정세균 "시세 절반 공공분양주택 공급"

민주당 '빅3'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정책 경쟁에 나섰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금융을 발표하면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후보 대표 브랜드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누구나 일당액(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계획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방지 대책도 내놓기도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 주치의 제도'로 맞붙을 뵈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하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주치의)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두겠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됐다. 국민이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의 주치를 두고 개인 생활·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되면 중복·과잉 검사 및 처방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 재정 악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낙연 후보의 설명이다. 전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공급폭탄'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이라며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이 130만호, 민간공급이 150만호다. 공공주택 가운데 100만호는 공공주택기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등이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총 18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을 포함하면 재원은 충분하다"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에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값 격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